

‘국익중심 실용외교’ 세계 초강대국 시험대 넘었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새 정부 출범 후 뒷늦게 협상에 뛰어들었음에도 ‘결과물’을 내놓는 데 성공했고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본격 가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큰 짐을 내려놓은 이 대통령은 다가올 외교적 빅 이벤트를 준비하며 외교적 발걸음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회복과 개혁 과제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추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첫 중대 고비 결과물 8월 한미정상회담 등 보폭 넓혀 경제회복·개혁 본격 드라이브

이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공세에도 국제 무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자평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호혜적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세부 내용이 모호한 데다 한미 양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적

다.

아울러 2주 내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 6일 첫 통화 이후 중동 정세 등 돌발 변수로 인해 거듭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통령이 다음으로 맞이할 외교적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두고, 유엔총회와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세협상이란 큰 외교적 숙제를 마친 만큼 이 대통령은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 체질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활동 마무리 단계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곧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1기 내각이 대부분 완성된 만큼 ‘내란 종식’과 군·검찰 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 “협상 노심초사…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세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짧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



한미 통상협약의 결과 브리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약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정관(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 제공

강기정 시장 “자동차·가전 주력산업 피해 완화”

AI가전 개발 등 대응방안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시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 기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환영하며, 자국 중심 외교정책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고된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타결된 것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광주 완성차 공장의 차량 생산 및 수출 정상화, 협력 부품업체의 경쟁력 회복,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주 물량 감소와 고용 위축 등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AI 프리미엄 가전 개발,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관세 충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지사 “쌀·소고기 추가 양보 없어 환영”

“조선 협력 새로운 기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쌀과 소고기를 추가 양보 없이 지키게 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쌀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 이웃 나라보다 협상을 매우 잘했다”며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의회 “식량안보·농업 지킨 의미있는 결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1일 발표한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농업을 지켜낸 의미있는 결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고, 소고기는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이들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절대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 농민과 함께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농업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켜낸 점은 환영하지만, 앞으로도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통상정책에서 농업을 협상 테이블 바깥에 두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4500억달러 투자·에너지 구매로 트럼프 설득

조선 프로젝트 ‘마스가’ 주요 쌀·소고기 ‘레드라인’ 지켜

한국이 총 4,500억달러(약 626조원)에 달하는 조선 중심 대미 ‘투자 펀드’(3,500억달러)와 에너지 구매 카드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제안에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예상대로 한국 조선 산업 역량이 대미 관세 협상의 결정적 돌파구 역할을 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투자 펀드’로 언급된 이 투자 패키지는 앞서 일본이 제시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

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투자(equity),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주요 국내 기업들의 대미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계획을 묶어 ‘1,000억달러+알파(α)’ 수준의 대미 투자 계획안을 제안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4,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요구해 협상 구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미국의 ‘펀드’ 투자 요구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 나온 요구였기에 한국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감당한 범위에서 이 같은 요구를 대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중심이 한국의 강점인 조선에 맞춰진 점도 일본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가’로 명명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이 중요하게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에 두루 투자하는 범용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한일 펀드로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 대부분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분야라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혜택이 우리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조선의 경우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선 펀드의 직접 수혜자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조선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부흥 등 카드를 앞세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레드라인’으로 간주했던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현상을 지켜낸 것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주요국 대미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국회, 후속 지원 나섰다… ‘조선·철강’ 입법 봇물

여야는 31일 한미가 타결한 관세협상의 영향을 주시하며 조선·철강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은 이날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마스가 지원법’(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 조선소에 방산 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해 미 군함·수송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조선 협력기금과 범정부 조선 협력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등을 보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다. 한미 무역에서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산업을 조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김현수 기자